

<토론문>

1 주제: 바람직한 금융정책 방향과 금융개혁 과제

2 주제: 일자리 창출과 금융

메리츠종합금융증권(주)

배준수 전무

1주제	바람직한 금융정책 방향과 금융개혁 과제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중소·벤처기업 활성화와 관계형 금융

- 금융그룹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투자-융자-정보생산 등을 결합하는 방안의 경우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열회사간 고객정보 공유 등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이 선행될 필요.
 - 현재 금융지주그룹 이외에는 고객정보 공유가 금지되며, 금융지주 산하 계열사간이라도 “내부 경영관리”목적으로만 고객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영업목적으로는 불가
 - 동일 회사내에서도 이해상충 방지 차원의 복잡한 Chinese Wall로 인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공유는 실제로 불가
- 금융투자사 또는 은행의 중소기업 지분보유 확대 방안의 경우 정책효과나 은산분리 원칙을 논하기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단기적으로 낮은 수익성, 높은 리스크를 염려하여 스스로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
 - 경영권 확보없이 기업의 사업 리스크를 공유하는 것은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금융회사 역할과 고객의 자산관리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
 - 이는 금융회사 고유계정보다는 전문투자자 한정 PEF 등의 다양한 규제를 풀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도할 필요

- 아울러, 금산법상 비금융회사 소유(20%) 제한, 은행·보험업 법상 자회사(15%) 소유 제한,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편입 업종 제한 등 중층적 규제의 균형감 있는 개선 필요.

2.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개선과제

- 중소·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타당

-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사례와 같은 금융그룹내 대출(은행)과 지분투자(계열 PEF)의 결합 확대도 바람직하며,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동일 회사내 대출·투자 허용 방안 고려 필요

※ 초대형 IB 외에 일반 금융투자회사에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건전성(NCR) 규제시 차별 해제 등 획기적 방안 검토 필요

- 신기술금융업자와 창투사간 규제차익(의무적 40% 신주 등 투자) 해소도 의미 있으나 중간회수시장(세컨더리 펀드, M&A 등) 육성 목적 인센티브 부여 또는 IPO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 필요.

- 소액주주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 면제
- 주식 양도차익 과세시 손실 이월공제 허용 (Capital Gain tax 전제)
- 증권사가 직접 또는 GP인 PEF 통해 5% 이상 투자한 비상장 기업의 IPO 주관업무 수행 허용 등

□ 특히,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투자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고 시스템 리스크 초래 우려도 적은 금융투자회사 관련 규제를 적극 재검토할 필요

- 금투회사의 과도한 레버리지비율, 순자산비율(NCR) 규제
- 공사로 판단기준(투자자의 수, 전문투자자 범위) 등

※ 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시 부가되는 조건이 또다른 규제로 작용하여 당초 목표한 정책취지 달성을 어렵게 하는 문제

□ 투자자 보호 위한 ‘원칙중심’ 규제 방식 도입 관련

- 원칙중심 규제가 규정중심 규제에 비해 금융회사의 자율·창의를 제고하고 금융혁신에 유리할 것이나 이는 ‘매우 현명한 금융감독자’가 전제될 경우에 효과적
- 신고·보고제의 실질적 승인제 운영, 검사·제재권 보유 감독기관의 과도한 구두개입 등 감독방식과 최종적 감사기관의 실질적 변화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정책효과 발휘 가능

3. 은산분리 규제완화 논의에 대한 검토

□ 일정 조건 충족시 은산분리 원칙의 일률적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의견은 뒤떨어진 우리나라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우 생산적 제안

- 다만,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고위험 업무(중금리 대출, 벤처파이낸싱)로 제한하면서 은산분리의 예외를 적용하자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 필요.

-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가 이미 기존은행의 업무범위와 같아 다시 규제하기 어렵고, 고위험 업무 위주로 영위시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 증가 우려 등

-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, 대주주의 은행 지배 구조에 대한 영향력 행사 차단 및 강력한 감독시스템을 갖춘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금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

-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시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본질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가 파묻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

※ 산업자본이 15% 이내 지분 보유했던 지방은행에서 금산결합 폐해가 발생했었는지 실증분석하는 것이 도움될 것임

2주제 일자리 창출과 금융

- 금융권 자체 일자리는 현재 축소되는 상황이며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
 - 정보기술(IT) 발달에 따른 비대면 거래 관행의 급속 확산으로 촘촘한 지점망 유지 필요성 감소
 - 경쟁력 우위 유지를 위한 대규모 점포 전략
 - 은행, 증권, 보험의 복합점포 증가 가능성
 - 다만, 전통적 IT, 빅데이터, 핀테크 관련 금융사업부문의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
 -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력 유지를 위해 IT투자를 증가시킬 유인이 크며, 금융당국의 IT 부문에 대한 예산 및 고용 강제 할당 정책도 고용 확대에 결과적으로 긍정적 효과 초래
 - 금융산업 내부의 고용증대를 위해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·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
 -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거나 추종하기 위한 투자를 주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※ (사례) M증권 리테일 고용 추이
(2011.12) 516명 → (2016.12) 892명, 5년간 약 73% 증가

□ 금융의 실물경제지원 기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관련하여,

- 금융회사에 대한 직·간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 귀속주체의 차이로 인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- 차라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업무영역 내지 영업행위 제한 관련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간 경쟁을 통한 중개기능 강화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.